

송희경 사무관 (02-2100-1721)
김지웅 사무관 (02-2100-1725)

- 1 -

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

가. 금융회사의 AML/CFT관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 (안 §10)

- (현행)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법 제5조*의 적용을 전부 (금융지주·증권금융회사, 집합투자업자) 또는 일부 (새마을금고중앙회, 신탁업자 등) 면제

* ① 의심거래 (STR)·고액현금거래 (CTR)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, ② 업무지침 마련, ③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및 연수 등

- (개선) FATF 국제기준*과 미, 영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면제 규정을 삭제

* FATF는 '09년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上記 금융회사에 대한 일률적 적용면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

나. 고객확인제도의 개선 (안 §10조의4, §10조의6)

- ① (현행)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성명만을 수집하고 있으나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 간 식별이 불가*

* 개인이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 고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소지

- (개선)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고객확인 사항 중 '대표자의 성명'을 '대표자 실지명의' (성명, 주민번호)로 변경

- ② 고객확인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

- 적용대상 업권이 증가하고, 금융거래방식 등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위임

다. 금융정보분석원(FIU)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 (안 §13의2④)

- ☐ **(현행)** FIU의 보유정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정보보존기간 (5년, 10년, 25년*)을 명시

* ① 특정금융거래정보, ② 전신송금관련자료, ③ 외국환거래자료는 25년 보관

- ☐ **(개정)** 25년 보존 대상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 관련자료,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

* 특정금융거래정보(STR 등)는 범죄혐의 관련 자료로 공소시효 (미적용 범죄 제외 최대 25년) 등을 고려 단축대상에서 제외

라.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확대 (안 §14② ,별표1)

- ☐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 (국토부 지적전산자료)을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*에 포함

* 현재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공사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자료, 「식품위생법」상 영업허가 자료, 「관세법」상 물품의 수출·수입신고자료 등 요청 가능

마. 검사·제재 권한 위탁 제도정비 (안 §15③ 제13호)

- ☐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·제재 권한을 사업허가·감독 권한*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

* 제주도 소재 카지노 : 제주도지사, 그 외 카지노 : 문체부 장관

바.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(안 §17, 별표2)

- 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·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명시

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(안)

◆ 각 검사수탁 기관*에게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절차 및 기준 부여

* (현행) 금감원은 「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(금융위 고시)」에 따라 검사, 우본·새마을금고·농협중앙회 등은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검사

◆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

가. 검사운영 절차 등을 명시 (안 §5~§13)

□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* 및 FIU의 관리업무를 명시**

* 사전통지, 검사결과 통보, 제재조치 등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(금융위 고시)」에 준하여 절차를 마련

**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계획을 사전통보받고, 검사결과를 점검 등

나. 제재기준 구체화 (안 §14~§22)

□ 특금법(§11)에 규정된 기관·임원·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 제공

□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

* 현재까지는 FIU 내부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·부과해왔음(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는 「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 관한 규정(훈령)」에 따라 진행)

다. 제재절차 개선 (안 §23~§28)

□ 제재의 공정성·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*을 포함한 「FIU 제재심의위원회(FIU원장 자문기구)」를 구성·운영

* (안)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이상 경력자,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학계 5년 이상 종사자, 관련부처 5년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FIU 원장이 위촉

라. 검사역량 강화(안 §11)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(안 §29)

□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(연 1회이상)

□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검사수탁기관 협의회」를 정례화(연 2회)

4 기대효과

- ① 현행 AML/CFT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
- ② AML/CFT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·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
- ③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아태지역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공고히 함

5 향후 추진일정(안)

	시행령 개정안	검사 및 제재 규정(안)
입법예고	'17.11.23~'18.1.6 (45일)	
법제처·규제위 심사	'18.1~2월	
차관·국무회의	'18.3월	※ 금융위 의결('18.3월)
시행	'18.3월 (공포일부터 시행)	'18.7.1일 (공포 3개월 후 시행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